

<화학산업 의식을 개혁하자>

산자부의 조직개편 기준은?

정부조직은 정치, 경제,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중앙정부는 IMF를 완전히 극복하는 핵심 포스트이고, 2000년대 국가발전을 설계하는 요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조직은 비능률과 비효율의 표본으로써 21세기 국가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추진하는 역동체라기 보다는 오히려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저해하는 역기능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것은 정부조직간의 유기적 연결관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조직 운용상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고, 조직원인 관료들의 공무의식 결여와 사적 도구화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를 보더라도 88년 노태우정권, 93년 YS정부를 거치면서 수차례의 개편을 단행했지만 조직이 효율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기형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화학 관련부서가 대표적이다.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 화학제품과는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책에 따라 화학공업국을 모태로 출발했지만, 80년대에 기초공업국 산하 석유화학과의 정밀화학과의, 그리고 섬유생활공업국의 화학제품과의 이원화된 후 93년 섬유화학국으로 개편되면서 기초화학과의 화학제품과의 일원화되더니 얼마 후 기초공업국과 생활공업국으로 분리되었다.

98년 개편시에는 화학제품공업과는 생활공업국 산하 생물화학산업과로 살아남았으나, 기초화학과는 금속철강부문과 통합해 자본재산업국 산하 기초소재과로 출범하면서 존재의미 자체가 없어지고 있다.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위해서는 양과를 통합해 화학산업과로 재출범시키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정부조직의 비정상화는 산업과 조직의 연계성보다는 관련관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직을 신설하거나 통합하는데 중점을 둔 때문으로, DJ정부에서도 이를 일신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중앙정부 조직을 일신하고, 그에 걸맞는 개혁적 인사를 단행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연인데도...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 개편안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일본정부는 최근 장기적인 중앙정부 개편안을 발의, 2000년대 국제사회 및 경제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경제·사회 관련부서를 대폭 통폐합하고, 관련업무 상당부분을 민간에 이양하거나 민영화시키기로 결정했다. 대표적인 것이 통산성을 경제산업성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통산성 업무에 원자력을 이관받고 경제기획기능을 보강하는 대신, 공업기술원을 폐지하고 산하 국립연구소를 독립법인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자원에너지청, 특허청도 독립 대상이다. 또 산업 및 무역관련 국·과도 통폐합 대상이다.

일본정부는 사회·교육부서 통폐합도 추진하고 있다. 후생성과 노동성을 통합해 노동복지성으로,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은 2001년1월 교육과학기술성으로 통합하며, 농림수산성은 농수산 업무에 식료품 안전업무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들 부서도 각종 연구소를 독립법인화함은 물론이다.

일본의 중앙정부 개편안은 필자가 98년 정부조직 개편 때 주장한 안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2000년을 맞아 정부조직의 슬림화는 불가피한 대세이며, 전문화 시대에 중앙정부의 비대화는 경제·사회 발전을 막는 역기능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DJ정부도 98년의 정부조직 개편이 미흡하다고 보고 취임 1주년을 맞아 재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개편방향은 당연히 슬림화와 효율화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경제·사회부서를 예로 들면, 산업자원부를 경제산업부로 개편해 말썽많은 재경부의 경제기획 및 과학기술부의 응용기술, 보건복지부의 의약·식품 업무를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또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합해 노동복지부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부로 재편하는 것이 업무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일부에서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를 통합하자는 안을 제기하고 있으나 기초과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이 바람직하고, 정보통신부 통합은 정책적인 결정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 업무의 행정자치부 이관은 행정자치부의 업무성격을 재조정해야 하는 난점이 있다.

정부조직의 슬림화와 개혁적 인사 등용은 21세기 국가발전을 좌우하는 요체이다.

<화학저널 1999/3/1>